

새로운 차원의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해야



경북 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 재 호

국민소득 일반불시대, 상대적 빈곤, UR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축산폐수 처리법, 목부 구득난, 지가폭등, 농촌총각 장가들기, 집단이기주의, 당리당락 정치권, 체제수호, 원천봉쇄, 국제경쟁력.....이같은 용어들을 머리속에 떠올리며 축산인의 한사람으로 축산문제를 생각해 보노라면 무거운 절 옮기느니 가벼운 종이 떠나는것이 낫다는 속담이 중얼거려진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기에 심각성이 있는것이요, 농촌을 지키겠다는 외곬인생의 오기가 용납치 않는것이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축산이 살아남을수있는 길은 어떤것일까고 누구에게 물어보다도 쉽게 대답을 하고있다. 『축산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규모의 전업화 및 시설의 과학화』 『생산농가의 협동조직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같이 알고있고, 공감을 하면서도, 불안감이 더해감은 어떠한 연유에서인가?

수많은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의지에 대한 의문은 떨쳐 버릴수 없고 따라서 전업농에의 꿈을안고 시설 현대화에의 투자에도 망서림을 갖게되는 현실인것이다. 그러나 걸프전쟁에서 목격했듯이 『일차산업의 바탕없이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사상누각』 일수밖에 없음을 이나라 공직자 엘리트들이 간과하지는 않으리라 믿기에 희망마저 포기함은 성급하다 하겠다.

옛날에도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다. 하물며 지구촌이라 일컬어지는 개방화 시대에 정부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것이며, 정치권의 정치현상부재의 현실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살피고, 챙기고, 우리것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된것이다. 그러기에 온갖 기존세력의 저항을 헤쳐가며 새로운 의미에서의 협동조합들이 착착 설립되어지고 있는것이다. 양돈, 양계, 양봉, 낙농협동조합등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이 분업화 전문화시대

에 걸맞게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방화시대에 심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함에서다. 배합사료를 마냥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에 맡겨놓을 수 없듯이, 값싼 수입원료를 쓰지 말고, 비싸더라도 한국 축산인이 생산한 축산물 원료를 이용해달라는 기업인의 애국심에 대달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주인인 우리조합으로 하여금 생산활동을 위한 기자재 및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해야 하며 선진 농업국들이 그러하듯, 생산물의 수집,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정착될 때 한국의 축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고, 이상론자의 희망사항으로 비쳐질 정도로 슬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무엇보다도 주체가 되어야 할 축산농가의 의식구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피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타성에서 기인한 주인 의식의 결여와 지난날의 협동조합에 대한 불신의 벽으로 인한 참여의 주저는 숲을 살필 줄 아는 심안(心眼)을 흐리게 하고 있고 나아가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본질을 망각하고 조합간의 마찰을 빚는 복잡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으로 들수 있는 문제로는 주변여건의 어려움이다. 치솟은 땅값은 공장부지 확보는 물론 사무소 마련마저 어렵게 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은 또 다른 의미의 착취기관 비난성을 들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하겠으며, 너도나도 조합의 기반 다지기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업무 또한 이제는 기대할 바 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제도적 모순성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고, 정책적 배려에서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으며 반세기간 굳혀 온 터라 간단한 제도수정만으로는 제구실을 다하는 민주조합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짧은 지면으로 상론키는 어려울 뿐 아니라 몸담아 이끌고 있는 지도자분들께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여겨지기에 구체적인 실패만 몇 가지 들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조합원 권익보장에 있고 조합원간의 끈끈한 공동유대가 이루어짐에 있다 할진대 재산성이 보장되는 한 업무구역, 업종영역, 조합원 수는 적을수록 이상적이라 하겠는데, 다분히 견제 혹은 억제되고 있다. 지역축협 업종조합등의 단위조합들이 연계하여 보다 큰힘을 발휘하여 조합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이루어진 제도가 축협중앙회 일진데, 중앙회와 회원조합간 사업상 마찰을 빚고 있다면 어딘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던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가 협동조합 정신이라면, 조합간의 영역확대나 부당한 경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재벌기업 편중지원이 비판받는다면, 협동조합 평준화 작업에는 구호성에 그쳐서는 더욱 안될 일이 아닌가? 선진국 협동조합들이 자율성인데 비하여 중앙회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제도하에서 중앙회의 능력한계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소정의 요건구비로 인가를 취득하고 업무를 개시한 조합들을 회원조합으로 가입시키지 않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함도 순리라고는 하지 못하리라.

협동조합의 존립목적이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에 있고, 개방화시대에 축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에 인식을 같이한다면, 정책당국이나 축산인 모두가 이점을 초점을 맞추어 기득권에 연연치 말고, 과감히 새로운 차원의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